

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두56787 판결

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][미간행]

판결

【원고, 상고인】 원고 1 외 2인

【피고, 피상고인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【피고보조참가인】 ○○○○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법 2018. 8. 23. 선고 2017누63483 판결

【주 문】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.

【판시사항】

- [1] 기존의 아파트 지구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,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
- [2]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,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
- [3] 기존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에 기존 추진위원회의 설립·승인에 대한 동의를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적극)